

특별기고

데이터 기반 감사혁신

임태형

광주시 감사위원장



경자유전(耕耨有田)의 원칙은 농지 정책의 근간이지만, 최근까지 농업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와 세제 혜택 악용 사례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왔다. 농업법인이 영농 활동 대신 부동산 임대·매매 등 편법적 수익사업에 관여하고, 세제 감면을 악용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의 신뢰성은 크게 훼손됐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등록지 중심의 형식적 점검에 그쳐 실질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곳이 바로 광주시다.

광주시는 지난해 남구정 종합감사에서 일부 농업법인의 불법 거래와 탈세 정황을 확인한 것을 계기로, 관내 농업법인 983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지방세 과세자료, 농지직불금 수령 내역, 부동산 거래 정보, 법인 등기·재무자료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 분석하는 새로운 감사기법을 적용했다. ‘조상 땅 찾기’ 제도와 정부24 등 국가 시스템을 함께 활용해 농업법인의 전국

단위 토지 소유 현황까지 확인함으로써 기존 행정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데이터 기반 조사 결과는 그동안 관리 부실로 감춰져 있던 현실을 명확히 드러냈다. 실제 영농 활동 없이 부동산 임대·매매 등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하거나 장기간 미영업 상태로 사실상 유령화된 농업법인 114개가 적발됐다. 시는 이 중 74개 법인에 해산명령을 통보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25개 법인에는 취득세와 과징금 등 총 106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방재정 확충뿐 아니라 탈세 관행을 차단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됐다.

이번 조사 성과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 확인의 어려움, 중앙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농업법인 조사는 전국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행정’으로 여겨져 왔다. 광주시는 이러한 난제를 데이터 분석·현장검증·세정 협업으로 풀어내며 농업법인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특히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부동산 매매 차이 분석, 법인 장부 검증 등 세목별 조사 기법을 체계화한 점은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질적 성과다.

광주시의 사례는 국정감사에서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5년 10월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시의 농업법인 조사는 ‘농지 투기 근절의 대표적 지방정부 모범사례’로 소개됐으며, 전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여 ‘2024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2025년 법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으로 그 혁신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방정부의 선제적 행정이 중앙정부의 정책개선 논의를 촉발한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광주시는 국회에 농지·국세·지방세·세외수입·직불금·부동산 거래 등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국정감사 우수사례로 추천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한 전국 농업법인 담당자 교육,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상시관리 체계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며 재발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사회 부패를 일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 1조원이 넘는 지방재정까지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했다.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생명과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 자원이다. 광주시의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은 이러한 기본 가치를 되살리고, 지방정부 스스로 제도 개선의 길을 열 수 있음을 보여줬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농업법인의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세징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 역량 강화와 정책 개선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돼 농지 투기와 탈세 관행이 근절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기고

대자보 도시 광주의 조건

신석기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복력도시 협력국장



2023년 가을 광주시는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도시’, 이른바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걷고 싶은 길’ 100개를 조성해 시민이 직접 걷는 경험을 통해 도시의 변화를 체감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이후 광주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람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이어가고 있다.

대자보 도시와 걷고 싶은 길의 사업은 단순히 인도를 정비하거나 확장하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속도와 효율을 추구하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안전·건강·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로, 우선 순위와 도시설계 철학을 바꾸겠다는 의지이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보행이 기본이 되는 도시’라는 개념이 도시 정책 전반에 스며들어야 한다.

현재 광주의 보행 환경은 시민들에게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를 가로막는 전신주와 불법 주정차, 인도 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곳곳에서 끊긴 보행로, 공사현장의 무단 점유 구간, 불법 광고물과 적치물 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유아차 이용자에게 더 큰 위협요소로 작용한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 체계 속에서 보행자의 안전권은 위협받고, 이동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도시의 모든 교통은 사람의 한 걸음, 즉 보행에서 시작된다.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보행은 출발점이

자 창작점이다.

이는 곧 도시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이 보행자임을 뜻한다. 집을 나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까지, 목적지에 도착해 최종 장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동은 결국 ‘걷기’로 완성된다.

따라서 보행은 단순히 교통체계의 한 부분이 아니라, 도시 생활의 토대이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 권으로 다뤄져야 한다.

앞으로 광주는 ‘보행이 기본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 수 있을까?

이는 단순히 보도를 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구조와 교통체계, 그리고 시민의 일상적 이동 방식을 사람 중심으로 재편하는 종합적 전환을 의미한다.

첫째, 시민 참여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나 상가의 인도 점유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주민과 상인, 행정이 함께 협의하고, 보행을 도시의 기본권이자 공공의 가치로 인식하는 지역 공동체 중심의 보행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둘째, 보도 설치 기준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토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보도의 유효폭을 최소 2.0m(불가피한 경우 1.5m)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구도심은 이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 그 결과 휠체어나 유아차는 물론,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도 어려운 구간이 여전히 존재한다. 보행이 기본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광주형 보도 기준의 상향과 단계적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도로 설계 단계에서의 근본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차량 흐름을 우선시하고, 남는 공간을 인도로 배치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그러나 보행이 기본이 되는 도시를 지향한다면 앞으로는 보행 동

선을 먼저 설정하고, 그에 맞춰 차로를 조정하는 ‘보행 중심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배치의 변화가 아니라, 도시가 무엇을 우선 가치로 두는지에 대한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넷째, 생활권 단위의 보행환경 전수조사와 데이터 기반의 개선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위험도와 필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보행환경을 일시적 사업이 아닌, 도시 운영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게 하는 과정이다.

다섯째, 광주의 보행 정책은 단순한 인프라 정비를 넘어 ‘15분 도시’ 개념과 연계해 보행 중심의 생활권으로 확장돼야 한다. 학교, 공원, 병원, 대중교통 정류장 등 주요 생활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어린이·노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속도 제한, 보행 전용 시간대 확대 등 실질적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단절된 인도를 잇고, 불합리한 경사와 단차를 제거하며, 보행자 신호 시간을 현실적으로(교통약자 보행 속도 고려) 조정하는 세밀하고 인간 중심적인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

광주가 진정한 ‘대자보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걷기 좋은 도시’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실천 과제가 돼야 한다. 보행은 가장 오래된 이동 수단이지만, 동시에 가장 미래지향적인 교통수단이다.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도시, 걷는 일이 불편이 아닌 일상이 되는 도시, ‘걷기 좋은 도시 광주’가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도시의 미래는 사람의 발걸음에서 완성된다. 이제 광주는 그 기본을 다시 세우야 할 때다.

망 사고가 발생한 것. 그럼에도 공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근본적인 안전 대책의 흔적은 뚜렷하지 않다. 중대 사고 이후에도 현상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붕괴는 엄연히 ‘관리 실패 연속’으로 정의해야 한다.

수사 당국은 특히 공법 적용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원·하청 간 작업 지시 체계와 감리·감독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전방위로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사법적 책임 규명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는다. 공기가 늦어질수록, 비용이 늘어날수록, 현장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왜 ‘안전’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는 한 공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기화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병폐가 응축된 결과다.

예산, 일정, 행정 절차에 밀려 안전이 뒤로 밀려나는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예견된 인재’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사설

호남특위 ‘반도체 기업 유치’ 현실화되길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공개 구애했다.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 투자를 공식 제안한 것이다.

반도체공장 후보 최적지로는 광주·전남 합평 접경지인 ‘빛그린·미래차 국가산단’과 광주와 전남 장성이 맞닿은 ‘첨단3지구’를 추천했다.

이들이 추천한 빛그린·미래차 국가산단은 차량용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경우 인공지능 모빌리티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고, 첨단3지구는 국가 AI컴퓨팅센터와 옹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와 연계해 첨단 패키징·반도체 R&D 특화 거점 조성이 용이하다.

호남 지역의 현안 해결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8월 발족한 정책 협의·실행 상설기구인 호남발전특위의 이번 공개 제안은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광주의 ‘절박함’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실제 2015년 147만 2000명이던 광주 인구는 매년 감소하다 올들어서는 140만명선이 무너져 139만4000여명으로 줄었다. 25년후인 2050년에는 120만7400명으로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10년 동안 청년인구 4만6000명이 광주를 떠났는데 이들의 85%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지난해 전체 유출인구의 73%가 청년인구였다.

이같은 현상은 광주지역의 낮은 임금 수준, 대기업·고임금 일자리 기반 부족, 교육-교육 연결성 약화, 부족한 문화·여가 인프라 등 구조적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즉,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기업 유치가 광주에 절실하다는 얘이기도 하다.

물론 광주·전남은 이들 기업이 들어설만한 최적의 여건도 갖춘 곳이라는 점도 이번 공개제안에 한 몫 했다고 한다.

수도권과 달리 지정학적으로 안정된데다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그 수량이 풍부하고, 반도체 인력 수급 또한 용이하다. 또 AI국가데이터센터와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등 기반시설과 연구·교육인프라도 충분하고 산업용지 또한 저렴한 상황이다.

또 이들 기업이 광주·전남에 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촉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호남발전특위의 이번 공개 제안에 이들 기업이 어떻게 화답할 지 관심이 되는 세말이다.

전남 1호데이터센터, AI생태계 확장 마중물

전남 제1호 첨단 데이터센터가 장성군에서 첫 삽을 떴다. 파인데이터센터 설립사업이 최근 장성군 남면 첨단 3지구에서 착공식을 가진 것이다. 전남도는 펀드 등을 통해 모금한 전체 사업비 3959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2월까지 26MW급 데이터센터 1기 공사를 마칠기로 했다고 한다.

3만2082㎡ 대지에 연면적 2만4244㎡인 지상 6층과 운영동 지상 2층 건물 및 부대시설이 들어서며 2028년 3월부터 운영한다.

특히 이곳에 400평 규모의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해 스타트업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고 AI·클라우드 분야 전문 교육도 함께하기로 했으며 부지 공터에는 풋살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개방하는 등 지역 상생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키로 했다.

특히 이번 착공이 남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지난 2023년 정부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따라 체결된 첫 업무협약(MOU) 사업이 실제사업으로 이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전남도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투자자와 유가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지난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7번째 프로젝트 선정돼 안정적인 사업 동력을 확보했다.

이 펀드는 정부·지방소멸대응기금·산업은행이 1000억원씩 출자한 3000억원 모펀드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3조원 규모 지역투자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을 말한다.

지난 10월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지원 대상으로 뽑혀 412억원 추가 투자를 이끌어 냈다.

이처럼 엄격한 사업성 검증을 거치는 두 개 정책펀드가 동시에 참여하게 되면서 설립사업은 탄력이 불었고 이번엔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남도는 데이터센터가 본격 가동될 경우 빅테크 기업의 전남 유입이 쇄도할 것으로 보고 전남이 지속가능한 AI·데이터 산업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착공한 데이터센터가 전남도의 AI 생태계 확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 경리장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